

# 긴장완화 의도? 군사옵션 명분?

‘한반도 8월 위기설’ 속 美, 北에 첫 대화 언급

급진적 강경론 일축  
압박·회유 균형유지  
평화적 대화 강조해  
북 제재 中 끌어내기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김정정은 정권의 교체나 북한에 대한 기습적인 군사 행동도 목표로 하지 않고 있음을 거듭 천명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군사 옵션’을 공개로 거론하고 미국 조야 일부에서 김정정은 정권 교체에 초점을 둔 대북 정책 전환, 주한미군 철수 같은 급진적 주장을 나오면서 심상치 않게 돌아가던 분위기를 일단 추스르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내 일각의 급진적 강경론을 우선 일축하고 군사 옵션 사용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려는 효과를 어느 정도 겨냥했다는 얘기가.

그러나 이르면 내년 미 본토 서해안을 사정권에 둔 북한 ICBM이 실전에 배치돼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것이라는 국방부 공식 전망까지 나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화’를 무게 있게 거론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도 없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북핵 문제에 실제 부딪쳐 보니 북핵 문제를 풀려면 ‘선제적’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시간 낭비’로 규정하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 작전’이라는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내놓았지만, 북한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대목에서 ‘대화’를 거론한 점이 최근 수위를 올려온 대북 제재와 중국 압박을 느슨하게 하려는 행보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평화적 대화 의도를 강조함으로써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제재에 협조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국제사회에 조성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중매체 “한국 사드 임시배치, 외교·군사 보복” 위협

중국이 다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이유로 한국에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김장수 주중 대사를 불러 항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외교 및 군사 보복을 각오해야 하며 양국 외교·경제관계가 장기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들 매체는 이번 임시 배치 결정을 두고 한국이 제 발등을 찢는 일이라고도 했다.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우선 자국 전문가들의 발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국이 사드 배치를 주장하면 한국과 중국의 외교와 경제관계

가 장기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사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중 양국 관계의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뤄차오 라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외교·군사 조치를 포함한 중국의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중국 외교부가 김장수 대사를 초치해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지난 해 7월 중국의 반대 속에 사드 배치를 결정 한 뒤 한중 관계는 급격히 나빠져 접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인 고객들을 잃어왔다”면서 “중국 내 롯데마트의 경우 112개 매장 중 겨우 12개만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주거·일자리·공원 늘려 살만한 곳으로



광주시 동구 일대 구도심의 인구 유출을 막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근본적인 재생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동구 계림동의 아파트 단지 공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인구 유출 못 막는 광주 구도심 재생사업 대책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개발법 등 다양한 법·제도 하에 광주에서도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거주민들이 구성된 조합과 건설업체가 주체가 돼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물론 공공자금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예술 등을 주제로 공동체 유지·보존에 중점을 두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시도됐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준공됐거나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불구하고 구도심은 ‘재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구도심만이 아니라 시 외곽에 꾸준히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집토끼도 산토끼도 잡지 못한 기존 구도심 재생사업=동구청은 오는 2020년 인구 15만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주택재개발 1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도시개발사업 3곳 등은 물론 그 외 도시재생사업들로 인해 외곽 인구가 다시 구도심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이미 재개발, 도시개발 등으로 3410세대가 최근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인구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는 이와 관련 재개발로 인한 철거가 진행되면서 증가분과 감소분이 상쇄됐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신규 아파트만 양산했을 뿐 시 외곽 지역과 경쟁해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미 시 외곽

### 원주민 정착 근본치방 필요

### 외부 인구 유입 매력 키우고

### 지역 특수성 감안해

### 지자체 고유사업 적극 추진

### 기존 도시재생사업

### 냉철 평가 반면교사 삼아야

지역에도 신규 아파트가 구도심 이상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 면에서도 ‘구도심 재개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 동구는 녹지 면적이 2.1㎡에 불과해 서구(13.2㎡), 북구(14.5㎡), 광산구(11.0㎡)에 비해 극히 열악하며, 문화 및 편의시설도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 구도심의 쇠락으로 시 외곽으로 이주한 원주민들의 상당수가 영세민이어서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구도심의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놓친 셈이다.

구도심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공동체 등 자원을 활용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도 정착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과 괴리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지와 소득 감소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외형 바꾸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구도심 인구 유출 막고 유입 늘리는 재생 시급=지난 2016년 4월 발간한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르면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2010년까지 광주 동·북·서구 동 등 구도심권에서 외곽 신시가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거지의 노후 및 열악이 가장 큰 이유지만,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구도심에 빈약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 ■ 2005~2020년 광주시 국비지원 주요 도시재생사업

| 사업명칭          | 개소                    | 예산         |
|---------------|-----------------------|------------|
| 주거지재생         |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1개소 | 599억8000만원 |
| 중심시기지재생       | 인문이 싹트는 송화마을 등 5개소    | 329억5800만원 |
| 지역역량강화        | 더하기지구 공동체 사업 등 6개소    | 45억2600만원  |
| 기초생활기반 확충     |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8개소     | 15억2000만원  |
| 근린재생형 일반 도시재생 | 광주송정역세권 등 2개소         | 200억원      |
| 새마을사업         | 별이뜨는 발산마을 사업 등 4개소    | 190억4400만원 |

## ■ 2025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 구분  | 총계  |      | 주거환경개선 |      | 주택재개발 |      | 주택재건축 |      | 도시환경정비 |      |
|-----|-----|------|--------|------|-------|------|-------|------|--------|------|
|     | 개수  | 면적   | 개수     | 면적   | 개수    | 면적   | 개수    | 면적   | 개수     | 면적   |
| 소계  | 118 | 7.80 | 65     | 3.77 | 29    | 2.69 | 17    | 0.83 | 7      | 0.51 |
| 동구  | 31  | 1.57 | 15     | 0.61 | 13    | 0.82 | -     | -    | 3      | 0.14 |
| 서구  | 24  | 1.71 | 16     | 0.84 | 3     | 0.51 | 5     | 0.36 | -      | -    |
| 남구  | 27  | 1.41 | 14     | 0.89 | 3     | 0.31 | 10    | 0.21 | -      | -    |
| 북구  | 16  | 1.27 | 5      | 0.16 | 7     | 0.61 | 1     | 0.17 | 3      | 0.33 |
| 광산구 | 20  | 1.84 | 15     | 1.27 | 3     | 0.44 | 1     | 0.09 | 1      | 0.04 |

수 있다. 주거인구를 늘리거나 유동인구를 불러들이는데 시 외곽지역보다 구도심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구도심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영세민이 대부분인 구도심 거주자가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주거지 공급 ▲시 외곽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공원·편의·문화시설 집적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차별화된 교통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 우선돼야”=광주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방비 부족으로 인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동력 미약, 전담조직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추진 예로, 국가공모에만 의존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을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 자체 사업 미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다 냉철한 평가를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실질적인 도시재생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이 자체가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꾸준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방의 도시재생정책을 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무엇보다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고자 하는 분명한 미래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며 “기존의 중앙부처 공모나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사업 추진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구도심 쇠락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

## 분양 전환 아파트 24/35 PY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